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

김도훈**

- I. 서설
- II. 민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 III. 민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
- IV. 민법 개정안의 동물의 법적 지위 변경에 관한 검토
- V. 결어

국문초록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성장과 그에 따른 문제의 증가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민법상 동물은 물건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외국의 경우, 민법상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는 내용을 포함한 입법례가 있다. 최근 법무부는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 변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동물 전체의 법적 지위의 변화에 대한 필요를 충족하는지 여부, 동물 관련 법률에서 전제하고 있는 동물에 대한 인식, 변경과 관련하여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동물의 법적 지위 변경에 관한 민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타당성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민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개정 근거로 제시한 내용 중 반려인구의 증가는 수치상 확인할 수 있고, 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 본 연구는 덕성여자대학교 2022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덕성여자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 법학전공 교수, 법학박사.

인식 확산 역시 일부 그 변화를 인정할 수 있으며, 동물 보호는 생명 존중과 안전 보장이라는 취지에서 충분히 공감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민법상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이 사회적 인식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여전히 여러 법률에서 동물을 물건으로 전제한 상태이고, 현 시점에서 해당 법률에서 전제한 상황에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현실에서도 이를 변경할 만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나 공감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민법 개정안은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원칙적인 것으로 규정하였고 동물에 관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동물은 생명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물건과 달리 평가할 여지가 있지만, 민법상 원칙적으로 동물은 물건으로 보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다. 따라서 현행 민법을 유지하여 동물은 원칙적으로 물건임을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 한 해 다른 취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예외에 관해서는 동물 보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개별법을 보완하거나 관련 일반법을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이라 생각한다.

• 핵심어 동물, 반려동물, 동물복지, 동물의 법적 지위, 민법, 동물법

I. 서설

반려동물¹⁾ 관련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2014년 반려동물 등록제²⁾가 시행된 이래 매년 등록되고 있는 반려동물의 마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³⁾ 등록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와 등록대상이 아닌 반려동물까지 감안하면 그 수는 더욱 많다.⁴⁾ 한편,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성장과 반려가구 증가의 이면

1) 현재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로 인정되는 동물로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가 있다(동물보호법 제2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2) 등록대상 반려동물은 개만 포함되어 있다.

3) 2020년 등록된 반려견이 23만 5,637마리이며, 누계로 232만 1,701마리(2019년 대비 11% 증가)에 이르고 있다; 2021년 5월 18일자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https://www.mafra.go.kr/> 방문일: 2022.1.3.

4)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동물등록제에 대해 응답자의 79.5%가 알고 있고, 반려견 소유자 중 72.1%가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종일 것으로 추정되는 반려견과 반려묘의 수는 무려 860만 마리에 이르고 있다; 2021년 4월 23일자 농림

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나 유기, 반려동물에 의한 물림사고 등 여러 가지 문제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반려동물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음⁵⁾을 볼 때,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성장과 문제의 증가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자연스레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동물의 법적 지위가 현재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시각⁶⁾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동물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보는 지에 따라 동물의 생산, 소유, 가공, 관리, 처분, 유통 등 여러 가지 면에 관한 다양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⁷⁾ 현재 민법상 동물은 물건에 해당하며, 이는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에 비해 외국의 경우,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는 내용을 포함한 입법례가 있다.⁸⁾ 우리 역시 이를 참조한 법안발의가 몇 차

축산식품부 보도자료, <https://www.mafra.go.kr/> 방문일: 2022.1.3.

- 5) 이에 관한 소개와 평가로는 함태성, “제19대 대통령선거 동물복지 공약에 대한 동물법적 평가와 향후 입법적 과제”, 『경희법학』제52권 제2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참조; 김상범, “이번 대선도 ‘반려동물 공약’ 화두 될까”, 2021년 8월 19일자 경향신문 기사,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108191554001> 방문일: 2022.6.16.; 이정탁, ““동물은 물건 아니다”... 정치권, ‘반려동물 보험’ 공약 봇물”, 2021년 9월 22일자 조선일보 기사,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1/09/22/BDYSLQ34ONCXBIARNKQEP2K7WA/> 방문일: 2022.6.16.
- 6) 김판가홍진희,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과 정책연구』제21집 제3호, 한국법정책학회, 2021, 325면; 법적관점에서 동물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동물 보호와 유대에 가장 기초적인 문제라는 지적으로는 윤철홍,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민사법학』제56호, 한국민사법학회, 2011, 399면.
- 7) 현행 법령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동물보호, 동물이용, 동물관리에 관한 법제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글로는 함태성, “우리나라 동물법의 현황 및 진단, 그리고 향후 과제”, 『법과사회』60호, 법과사회 이론학회, 2019, 332면 이하; 이를 동물의 생산, 매매, 소유, 관리, 질병, 보험, 유기, 학대, 세금, 죽음, 동물소유자의 이혼 등으로 구분하여 그 차이를 설명하는 글로는 김판가홍진희, “반려동물의 매매계약 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법과 정책연구』제20집 제1호 한국법정책학회, 2020 참조.
- 8) 윤철홍, “민사법 체계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법무부 연구 용역 보고서』, 법무부, 2018; 윤철홍, “독일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인권과 정의』통권 420호, 대한변호사협회, 2011; 윤철홍, “스위스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제68호, 한국민사법학회, 2014; 오승규, “프랑스법상 동물의 지위에 관한 검토”, 『법과정책연구』제15집 제4호, 한국법정책학회, 2015; 한민지, “스위스법에 따른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동향”, 『서울법학』제28권 제4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등 관련 입법례를 소개한 선행연구가 적지 않다.

례 있었고,⁹⁾ 민법 소관부처인 법무부는 이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이나,¹⁰⁾ 지난 2021년 10월 1일 법무부도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는 내용을 포함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민법 개정안”이라 한다.)¹¹⁾을 제출하였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 반려동물과 관련한 법적 문제 발생, 그리고 이의 해결을 위한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시도는 일견 논리적인 전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의 방법으로 민법상 동물 전체의 법적 지위를 변경하여 이에 대한 일률적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다양한 개별 법률에서 대부분의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는 현실에서, 민법상 이러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선언적 의미 이상을 갖기 어렵다. 나아가 실질적 의미를 갖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추가될 경우,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만약 동물 전체의 법적 지위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후속조치를 하려면, 단순히 민법 개정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동물과 관련된 모든 법령에 대한 확인과 검토가 필요하다. 즉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 변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동물 전체의 법적 지위의 변화에 대한 필요를 충족하는지, 동물 관련 법령에서 전제한 동물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관련 법령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필요로 할 만큼의 인식 변화가 존재하는지, 기타 추가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동물의 법적 지위 변경에 관한 민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의 필요

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31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9106);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 이하에서는 홈페이지는 생략하고 인용한다.

10)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9106)의 검토 보고서에서 관련부처인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입장 역시 동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추가적인 공감대 형성이나 논의가 필요함을 언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진선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2021, 12면.

1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2112764).

성 및 연구방향에 대해 정리한다(I. 서설). 둘째,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 변경에 관한 민법 개정안에 관해 간략히 정리한다(II. 민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셋째, 민법 개정안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제안이유에 대해 검토한다(III. 민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 넷째, 민법 개정안의 동물의 법적 지위의 변경에 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한다(IV. 민법 개정안의 동물의 법적 지위의 변경에 관한 검토). 다섯째, 결론에 갈음하여 향후 변화의 방향에 대해 정리한다(V. 결어).

II. 민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1. 제안이유

민법 개정안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동물 학대·유기 방지,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개선 및 동물권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 민법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 이러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민법상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규정하여 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려는 것임”¹²⁾을 제안 이유로 밝히고 있다.

제안이유에서 밝힌 개정의 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둘째, 동물 학대와 유기 방지 그리고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개선과 동물권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셋째, 현행 민법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 이러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민법 개정안은 “민법상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규

1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2112764), 1면.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동물에 관한 현실과 인식의 변화로 법과 괴리가 생겼으니,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규정하는 것으로 인식 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동물의 법적 지위까지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민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편제4장의 장 제목을 “물건”에서 “물건과 동물”로 변경한다. 둘째,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제98조의2),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제1항).”, “동물에 관하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2항).”라 정한다. 셋째, 제252조의 제목을 “무주물의 귀속”에서 “소유자 없는 물건 등의 귀속”으로 변경한다. 넷째, 제252조제3항을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에서 “야생(野生)하는 동물은 소유자 없는 동물로 하고, 기르던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 상태로 돌아가면 소유자 없는 동물로 한다.”로 변경한다.

개정안 중 제98조의2의 신설이 핵심이며 그 내용은 “동물의 법적 지위 변경”이다. 제1편제4장의 제목 변경과 제252조의 제목과 제252조제3항에서 무주물을 소유자 없는 물건으로 변경한 것은 동물의 법적 지위 변경에 따른 반영으로 부수적인 변화에 해당한다. 즉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와 “동물에 관하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가 핵심적인 내용이며, 개정안은 특히 전자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안이유에서는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규정하여 “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면서도, 동물에 관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런데 현재 동물에 관한 대다수의 법률은 동물이 물건임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동물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추가로 정비되지 않는다면, 동물은 물건이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III. 민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

1.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증가 여부 및 향후 전망

민법 개정안에서 제시한 첫 번째 근거에 해당하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 여부는 구체적인 통계수치로 확인이 가능하다.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한국에서 반려가구(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약 604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9.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려인은 1,448만 명에 이르고 있다.¹³⁾ 즉 이미 국내 가구의 상당수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음¹⁴⁾을 할 수 있다. 또한 동 보고서는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반려동물 양육 의향 조사 결과, “향후 개나 고양이를 키워보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47.8%로 나타나 반려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¹⁵⁾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 현황분석과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근거로 판단했을 때,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이미 상당수에 이르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13) 황경원손광표,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 - 반려가구 현황과 노령견 양육실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1, 6면. <https://www.kbfg.com/kbresearch/report/reportView.do?reportId=2000160> 방문일: 2022.1.11.

14) 반려동물로 개를 기르는 가구가 약 80.7%, 고양이를 기르는 가구가 약 25.7%를 차지하였고, 그 외 관상어, 햄스터 등을 반려동물로 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보고서, 7면.

15) 위의 보고서, 7면.

2. 동물 보호를 위한 법적 개선 필요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여부

특정 대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수단 중 하나는 그 대상을 지칭하는 표현의 변화라 할 수 있다. 과거 집에서 기르는 동물을 대상으로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2016년을 기준으로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¹⁶⁾ 2020년 개정 동물보호법에도 반려동물에 관한 정의조항이 신설된 바 있다. 이 같은 표현 내지 용어의 변화는 동물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인식이 확대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¹⁷⁾될 여지가 있다. 또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반려동물이 조사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역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다.¹⁸⁾

다만 특정 동물이 반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는 별개로 여전히 반려동물은 물건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 현실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기준 구조나 보호된 유실 또는 유기 동물은 무려 130,401마리에 이른다.¹⁹⁾ 즉 동물은 반려의 대상으로 여겨지면서도 여전히 물건처럼 버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처럼 변화된 인식과 사회적 현실의 괴리는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유발하게 된다. 즉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가 반려동물 나아가 동물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고, 이를 위한 법적 개선의 필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미 동물이 포함된 관련 법률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주로 공법적 요소를 지닌 법규에²⁰⁾ 동물 보호 및 동물 복지의

16) 이용숙, “가족으로서의 반려동물의 의미와 반려동물로 인한 구별 짓기”, 『한국문화인류학』50권 2호, 한국문화인류학회, 2017, 338면.

17) 위의 논문, 338~339면; ‘애완동물’이라는 표현보다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이 동물을 더 존중하는 형태라는 평가로는 권용수·이진홍,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관한 기본적 고찰”, 『조세와 법』제13권 제1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132면.

18) 권용수·이진홍, “민법상 동물의 지위에 관한 예비적 고찰”, 『법조』제70권 제2호, 법조협회, 2021, 111면.

19) 대상 동물은 개 73.1%, 고양이 25.7%, 기타 1.2%이다; 2021년 5월 18일자 농림축산식품부 보도 자료, 2면. <https://www.mafra.go.kr/> 방문일: 2022.1.3.

관점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²¹⁾

요컨대 동물은 반려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려의 대상이 되는 동물을 대상으로 한 표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동물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의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일응 동물 보호를 위한 법적 개선의 필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다만 동물 중 일부에 해당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근거로, “동물” 전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3.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에 관한 사회적 인식에의 부합여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주된 대상은 반려동물이다. 지방법원 판결이기는 하나 반려동물과 관련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등을 인정하여 반려동물의 객관적 가치 이상의 손해를 인정함으로써 물건과 달리 취급한 예가 있다²²⁾는 점에서 반려동물의 경우 물건과는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를 기존의 동물 일반에 관한 인식 변화로 평가할 수 있는가. 반려동물은 전체 동물 중 지극히 일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곧 동물 전체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 단정할 수는 없다. 사회적으로 동물은 상당 영역에서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20) 박정기,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제51권 제3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25면.

21) 윤철홍,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개정시안”, 『재산법연구』제29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회, 2012, 261면.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선고 2019가소2068733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5.15. 선고 2017가단512394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2.13. 선고 2013가소35765 판결 등 참조.

즉 반려동물을 제외한 동물의 경우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사회인식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법률과 현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식용대상으로서의 동물

동물의 일부는 식용대상이다. 이는 축산업,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식품위행법 등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동물을 식용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동물이 물건임을 전제한 것이다. 나아가 대상 동물은 단순한 식용대상이 아닌 주요 식자재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2021년 쇠고기 수입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²³⁾ 2022년에는 육류 소비량이 쌀 소비량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²⁴⁾ 물론 대체육 관련 산업도 활성화되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육식이 주류인 상태이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러한 현실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²⁵⁾ 나아가 식용대상이 될 수 있는 동물에 관한 산업은 소득원의 하나로 혹은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법에 근거하여 산업적 차원에서 육성 및 지원 대상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축산업법은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제1조). 그리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정이유에서 “곤충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국내 곤충산업이 21세기의 새로운 산업으로 정착함과 아울러 개방화 시대를 대비한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23) 이규희, “지난해 쇠고기 수입량 역대 최대...미국산 소비량, 국산 처음으로 앞서”, 2022년 2월 8일자 농민신문 기사; <https://www.nongmin.com/news/NEWS/ECO/COW/350874/view> 방문일: 2022.6.9.

24) 김덕준, “한우협회, 한국 1인당 쇠고기 소비량, 일본의 배 수준”, 2021년 8월 15일자 부산일보 기사;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81516554602433> 방문일: 2022.6.9.

25) 최근 대체육에 관련된 투자가 급격한 감소세에 있다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권건호, “글로벌 대체육 투자 급감”, 2022년 6월 8일자 전자신문 기사; <https://www.etnews.com/20220608000172> 방문일: 2022.6.9.

것임”을 밝힌 바 있다.²⁶⁾ 또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정이 유에서 “우리나라 수산식품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수산식품 산업 및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을 밝힌 바 있다.²⁷⁾ 즉 상당수의 동물이 현재 식용대상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관련 산업이 육성 및 지원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에서 조차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은 그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조 단서). 따라서 식용대상인 동물의 경우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이 사회적 인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없다.

(2) 실험대상으로서의 동물

동물의 일부는 실험대상이다. 이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원론적으로는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자체가 동물을 물건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동물보호법상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이를 덜어주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제24조) 유실, 유기동물이나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동물의 경우 실험대상으로 삼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제25조). 또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역시 관련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책무 중 하나로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 인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이 제시되어 있다(제5조 1항 8호).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변화의 필요성이나 인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 국제적으로도 여러 선진국에서 실험동물 사용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강조되면서 동물실험을 대체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²⁸⁾ 우리나라 역시 과도한 실험동물 사용에 대한 문제인식

26)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 방문일: 2022.6.9.

27)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 방문일: 2022.6.9.

이 확산되면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²⁹⁾도 사실이다. 즉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와는 전혀 상반되는 모습을 보인다. 2020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동물사용 건수는 3,727,163건이었으나 2020년 사용 건수는 4,141,433건으로 증가한 바 있다.³⁰⁾ 또한 아직 공식자료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2021년 그 수는 4,880,252건에 이를 것이라는 기사³¹⁾를 확인할 수 있다. 동물실험 연구 분야 중 특히 “법적인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규제시험”이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화장품이나 화학물질 등과 관련한 안전성 규제 강화가 그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³²⁾ 이러한 안전성 규제 강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적절한 대체수단이 마련될 때까지 이 같은 증가세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9월 환경부는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실행계획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소개한 “2030 화학안전과 함께하는 동물복지 실현 비전”에서 2030년까지 화학물질 시험분야 동물대체시험 비율을 6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³³⁾ 이는 동물대체에 향후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온전한 대체를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임을 의미한다. 인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험동물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가 예상된다. 즉 인식 변화에 따라 실험동물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기는 하나

28) 미국, 유럽, 영국, 일본 등에서 다양한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논의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동물실험의 수가 2015년 정점을 찍은 후 점차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종란·임정민, “동물대체시험법”,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8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0, 15~17면 참조.

29) 위의 자료, 17면.

30) 2020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조사 결과;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시스템 <https://www.animal.go.kr/aec/community> 방문일: 2022.6.10.

31) 이학범, “2021년 실험동물 488만 마리 사용...역대 최다”, 2022년 4월 22일자 데일리벳 기사; <https://www.dailyvet.co.kr/news/practice/laboratory-animal/164646> 방문일: 2022.6.10.

32) 2020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조사 결과;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시스템 <https://www.animal.go.kr/aec/community> 방문일: 2022.6.10.

33) 서보라미, “동물대체시험 기술, 2030년까지 선진국 수준 확보”, 2022년 1월 21일자 한겨레 기사; https://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1028279.html 방문일: 2022.6.10.

사람의 필요에 의해 실험동물은 여전히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유희대상으로서의 동물

동물의 일부는 유희의 대상이다. 이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한 국마사회법, 말산업 육성법,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법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람들은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통해 다양한 동물을 제한된 공간에 가둔 상태로 교육이나 유희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물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유 생물에 대해 생물종의 특성에 맞는 영양분 공급, 질병 치료 등 적절한 서식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학대행위, 상해행위, 유기행위 등을 금지하는 한편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³⁴⁾ 이처럼 동물원 및 수족관에서 관리하는 동물에 대한 일부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상 동물을 한정된 공간에 가두어 두고, 사람의 호기심과 즐거움의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일각에서 동물원이 동물학대의 현장이라는 목소리³⁵⁾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와 그에 따른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여전히 공휴일에 가족단위로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찾는 것이 흔한 일상의 모습이다.³⁶⁾

또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동물 간의 경쟁이나 다툼을 통해 유희를 즐기는 경마와 소싸움 역시 법적 근거를 갖고 인정되고 있다. 이는 동물원이나 수족관과 같이 동물을 단순한 관찰의 대상이 아니라 특정 공간에서 특정 행위를 강제하고 그 행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는 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형

3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16조 참조.

35) 정채영, “아이들은 즐거워 한다지만...동물들의 학대 현장 동물원”, 2022년 5월 15일자 데일리안 기사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13585/?sc=Naver> 방문일: 2022.6.11.

36) 이준엽, “숨사탕 손에 들고...가정의 달, 일상회복 동물원 인파” 2022년 5월 7일자 YTN https://www.ytn.co.kr/_ln/0103_202205071409362148 방문일: 2022.6.11.; 김남영, “포근한 휴일 즐겨요...동물원 봄나들이 인파”, 2022년 3월 27일자 서울경제 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263KWU2FOJ> 방문일: 2022.6.11.

태라 할 수 있다. 이에 경마나 소싸움 역시 동물복지에 반하거나 동물학대라는 주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³⁷⁾ 실질적으로도 동물보호법상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동물 학대행위로 금지대상이며, 소싸움은 정확히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은 제4조 제1항에서 동물보호법상 학대금지 조항³⁸⁾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³⁹⁾ 소싸움에 돈을 거는 행위 역시 사행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라 규제의 대상이지만, 이 역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서 소싸움경기 투표권 발매에 관해서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나마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소싸움경기의 경기 운영 및 방법을 정할 때 싸움소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 동물보호에 관한 내용에 해당한다.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행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경마나 소싸움은 국가나 지역사회 경제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강조되고, 스포츠산업 또는 레저산업이라는 명칭 하에 활성화의 대상으로 인식⁴⁰⁾되고 있다.⁴¹⁾ 예를 들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상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37) 최근 소싸움과 관련하여 시민단체들은 동물 복지에 반하는 것이라 주장하는 한편, 소싸움 승패로 도박을 하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어 문제가 된 바 있지만, 관할 시는 소싸움 경기가 전통 민속놀이이자 지역 문화유산으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강남중, “진주 소싸움 경기 동물학대, 도박 논란”, 2022년 4월 12일자 경남뉴스 기사; <https://www.gnews24.kr/news/articleView.html?idxno=16049> 방문일: 2022.6.9.; 정성환, 전용찬, “동물학대나 전통이냐...정읍 소싸움 예산 놓고 힘겨루기”, 2021.12.8.일자 시사저널 기사;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369> 방문일: 2022.6.9.; 이유진, “끊이지 않는 퇴역 경주마 학대 사건...경마장 떠난 그 말들은 어디로 갔을까”, 2022년 1월 23일자 경향신문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general/article/202201231736001> 방문일: 2022.6.9.

38)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39) 동물보호법 역시 해당 행위에 대해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40) 이재문·임승재, “사행성 스포츠산업 활성화 전략: 경마”, 『한국스포츠학회지』제19권 3호, 한국스포츠학회, 2021.

41) 예를 들어,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소싸움을 활성화하고 소싸움경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개발과 축산발전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임을 밝히는 한편(제1조), 소싸움경기 시행자는 소싸움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제3조)

다른 “소싸움”은 사행산업⁴²⁾에 포함되어 있다(제2조).⁴³⁾ 사행산업은 범죄증가, 생산성 저하, 중독자 양산 등⁴⁴⁾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재정 확충, 세수증대, 고용창출, 외화획득, 지역경제 활성화 등⁴⁵⁾ 긍정적인 면도 함께 갖고 있어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되고 있다. 그리고 국내 사행산업의 총매출액 중 경마와 소싸움경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다. 2019년 국내 사행산업 총매출액 22조 6,507억 원 중 경마 매출액이 7조 3,572억 원(약 32%)에 이르러 사행산업 중 가장 비중이 크고, 소싸움경기는 가장 작기는 하나 이 역시 매출액이 267억 원에 이르고 있어 절대적인 관점에서 작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⁴⁶⁾ 결국 인식의 변화로 대상 동물에 대한 복지 수준의 차이를 유발하는 수준 정도에는 이를 수 있겠지만, 경마나 소싸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적 이익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현실에 큰 변화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 현실에서 유희의 대상인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가능성이 높다.

(4) 박멸 및 개체 관리 대상으로서의 동물

사람에게 위해가 되거나 될 수 있는 동물은 박멸이나 개체 관리의 대상이다. 쥐나 모기로 대표되는 설치류나 해충과 같이 사람에게 위해가 되거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동물의 경우 박멸의 대상이다.⁴⁷⁾ 검역법규에서는 쥐와 모기를 대표적인 감

42) 사행산업은 “인간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거나 관련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을 말하며, 산업분류 체계상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내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에 속한다; 『2019 사행산업 백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20), 24면.

4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상 “개별 관련법규에 근거한 카지노업,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가 사행산업에 포함되어 있다(제2조 제1호).

44) 『2019 사행산업 백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20), 32면 이하.

45) 위의 책, 31면 이하.

46) 경마 7조 3,572억 원, 체육진흥투표권 5조 1,099억 원, 복권 4조 7,933억 원, 경륜 1조 8,337억 원, 강원랜드 1조 4,816억 원, 외국인 전용 카지노 1조 4,489억 원, 경정 5,994억 원, 소싸움경기 267억 원 순이다; 위의 책, 36면. 다만,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가 무려 -43%에 이르렀고, 경마의 경우 -86.4%, 소싸움경기의 경우 -93.1%의 매출액 감소가 있었다; 『2020 사행산업 관련 통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21, 10~11면.

47) 쥐나 해충은 과거부터 박멸의 대상이었고, 현재에도 그러하며 가까운 미래 역시 마찬가지 일 것으로 보인다; 강진일, “독도 쥐 개체 급증...박멸 사업 추진”, 2020년 7월 25일자 KBS NEWS ht

염병 매개체로 정하여(검역법 제2조, 검역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이를 검역조치 대상으로 삼고 있다(검역법 제15조). 또한 특정 동물의 개체 수 증가가 사람의 생활 환경에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 대상동물에 대한 포획이나 불임조치 등을 통해 개체 수를 제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멧돼지를 포획하는 것,⁴⁸⁾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들개나 소음을 유발하는 길고양이를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것,⁴⁹⁾ 배설물로 인한 피해로 비둘기에게 불임유발 성분이 포함된 먹이를 주는 것 등이 있다.⁵⁰⁾ 즉 사람의 생활에 불편이나 방해를 초래하거나 위협이 되는 수준의 문제를 유발하는 동물은 어떤 동물이든 관계없이 제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5) 사람의 필요와 선택에 따른 동물의 구분과 취급

사람은 그 필요와 선택에 따라 동물을 구분하고 달리 취급하고 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사람은 동물을 그 필요와 선택에 따라 반려대상, 식용대상, 실험대상, 유희대상 등으로 구분하여 이용하고, 위해여부에 따라 박멸대상으로 삼기도 하며, 소유 및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려동물 역시 사람의 선택일 뿐이다.⁵¹⁾ 반려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동물의 중

[tps://news.kbs.co.kr/news/view.do?ncd=4502690&ref=A](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502690&ref=A) 방문일: 2022.6.11.; 정여진, “양돈농가 차단방역의 복명 해충, 쥐 박멸하자”, 2020년 4월 13일자 농축유통신문 기사 <http://www.a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86> 방문일: 2022.6.11.

48) 정도정, “하동군, 이달부터 12월까지 멧돼지 포획한다”, 2022년 4월 25일자 브릿지경제 기사 <https://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20425010006179> 방문일: 2022.6.11.

49) 김동영, “강화군, 들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대대적으로 한다”, 2022년 6월 9일자 NEWSIS 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09_0001901650&cID=10802&pID=14000 방문일: 2022.6.11.

50) [굿모닝월드] 피임약 먹는 비둘기, 2022년 5월 31일자 기사 <https://www.mbn.co.kr/news/world/4773243> 방문일: 2022.6.11.

51) 반려(伴侶)에서 ‘반’과 ‘려’는 모두 ‘짝’을 의미한다. 짝의 사전적 의미는 “둘 또는 그 이상이 어울려 한 벌이나 한 쌍을 이루는 것”, “배필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즉 짝의 대상은 서로에게 대등한 존재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사람에게 동물은 반려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만, 동물도 사람을 반려의 대상으로 여길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반려동물은 어느 종류의 동물이 포함될 수 있는지, 그 종류의 동물 중 어느 개체가 반려의 대상이 될 것인지를, 반려동물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생활방식, 활동범위 등) 등 반려동물의 모든 것은 사람의 일방적인 선택

류는 사람의 선택에 의해 정해지고, 같은 종류의 동물이라 하더라도 식용대상, 실험대상이 될 수도 있고, 유희대상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동물보호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반려동물로 인정되는 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이다(제1조의2). 그리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상 실험동물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제2조 2호)로 그 범위가 넓지만, 동법 시행령은 우선 사용 대상 실험동물로 “마우스(mouse), 랫드(rat), 햄스터(hamster), 저빌(gerbil), 기니피그(guinea pig), 토끼, 개, 돼지 또는 원숭이”를 열거하고 있다(제8조). 즉 공통된 동물인 “개, 토끼, 기니피그, 햄스터”는 사람의 선택에 따라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로 적극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상 우선 사용 대상 실험동물로 실험의 주된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개와 토끼”의 경우 축산법상 가축이기도 하며(축산법 시행령 제2조 2호), 반려대상이 될 수 있는 종류의 동물 대부분은 동물원에서 사람의 학습이나 유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동물을 사람의 필요와 선택에 따라 이용하는 것은 동물이 물건임을 전제로 한 것이며, 이러한 모습은 앞으로도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 반려동물도 물건이며, 다른 취급 역시 사람의 선택에 따름을 전제한 현실

반려동물을 압류금지물건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다수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민사집행법 개정안”이라 한다)⁵²⁾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해당 개

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소유자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반려동물이 원하는 바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마저도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는 점에서 명백한 한계가 있다.

52)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264),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8390),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851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40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3573).

정안들은 내용과 근거가 대동소이하다.⁵³⁾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의미와 인식의 변화를 고려할 때 반려동물을 일반 재산과 마찬가지로 압류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을 근거로, 민사집행법 제195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반려동물을 추가하는 것이 그 골자이다. 민사집행법 개정안은 사회적으로 반려동물이 “사실상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조문의 변화는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반려동물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즉 반려동물은 여전히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는 다른 동물과 “다른 취급이 필요하다.”는 수준이며, “물건이 아니다.”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어느 종류의 동물을 어느 수준에서 반려동물로 압류금지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정안별로 차이가 있고, 문제의 여지를 갖고 있다. 반려의 의미를 갖는 동물이 모든 사람에게 획일적일 수는 없다. 하지만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되지는 것은 집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며 이는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기준은 일관성이 있고 명확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대상 동물이 고가로 거래의 대상이 되는 동물이라면, 반려동물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고가의 동일한 종류의 동물을 기르고 있다. 그런데 갑은 대상 동물을 투자의 목적으로 기르고 있고, 을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고 있다. 이때 대상 동물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면 갑과 을은 동일하게 대상 동물이 반려동물임을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대해 갑과 을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갑과 을의 동물이 모두 반려동물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반려동물 역시 반려의 대상이기 이전에 동물이고, 대상 동물이 “반려”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람의 선택에 달려있다. 즉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근거로 하면서도 반려동물 역시 여전히 물건이며, 객체임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53)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중 등록대상동물”,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대통령령으로 정함)” 등으로 안에 따라 범위에 차이가 있다.

“다른 취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수준에서의 변화가 시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IV. 민법 개정안의 동물의 법적 지위 변경에 관한 검토

1. 현행 법률상 동물의 법적 지위

현행 민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며, 기본법에 해당하는 헌법이나 형법 역시 동물을 재물이나 재산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해석⁵⁴⁾되고 있다.⁵⁵⁾ 동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개별 법률 역시 적지 않다.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등에 동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개별 법률마다 그 목적이 다르고 규율대상에 해당하는 동물의 종류나 유형에도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법규는 동물이 물건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동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 중 동물보호법이 기본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⁵⁶⁾고 평가 받고 있다. 이는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의 보호 및 이용·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6조).”고 정함으로써 일반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⁵⁷⁾

54) 함태성, “동물보호법의 입법적 평가와 향후 과제”, 『공법학연구』제21권 제4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20, 648면.

55) 다만, 헌법이나 형법이 명시적으로 동물을 물건으로 정하고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여지는 있다.

56) 김동훈, 『동물법 이야기』, PetLove, 2013, 22면.

57) 제정 당시 동물보호법은 12개의 조문에 불과하였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도 없는 상태였으며, 국내의 입법 필요성에 의한 입법이기에 보다 국내의 동물보호단체 등의 압력에 의해 이루어진 입

하지만 동물보호법 역시 동물의 법적지위에 관해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며, 동물의 범위 역시 모든 동물이 아니라,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를 그 대상으로 한다(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 즉 현행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이다.

2.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를 변경한 입법례⁵⁸⁾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헌법상 동물의 생명 존중과 복지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지는 견해도 있다.⁵⁹⁾ 하지만 동물의 권리와 복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일부 국가에서 조차 헌법상 동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추상적, 선언적 의무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⁶⁰⁾

또한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변화를 시도한 입법례 역시 비교적 최근의 것이다. 1988년 오스트리아 민법, 1990년 독일 민법, 2002년 스위스 민법 개정이 대표적인 예로 언급되고 있으며,⁶¹⁾ 우리 민법 개정안 역시 이를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1988년 개정 오스트리아 민법은 제285조의a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물건에 관한 규정은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 해 동물에 준용된다.”⁶²⁾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다음으로 1990년 개정 독일 민법은 제90조의a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법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함태성, 앞의 논문 54, 625~626면 이하. 다만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최근까지 수십차례의 개정을 거쳐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바 있다.

58) 입법례에 관해서는 이미 상세한 내용을 다룬 다수의 선행연구가 존재하므로, 민법 개정안에서 차용한 핵심 내용만 정리한다.

59) 동물의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현행 헌법체계상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보호 내지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이를 환경권 관련 조항에 추가하는 것은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로 함태성, 앞의 논문 5, 529~530면.

60) 윤철홍, “민사법 체계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법무부 연구 용역 보고서』, 법무부, 2018, 78~79면.

61) 각국의 민법 개정 과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윤철홍, 위의 논문 참조.

62) § 285a, Tiere sind keine Sachen; sie werden durch besondere Gesetze geschützt. Die für Sachen geltenden Vorschriften sind auf Tiere nur insoweit anzuwenden, als keine abweichenden Regelungen bestehen.

의해 보호된다. 그에 대해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물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⁶³⁾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2002년 개정 스위스 민법은 제641조의a에서 “1.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2. 동물에 대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물건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준용된다.”⁶⁴⁾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즉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모두 공통적으로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는 한편,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동물에는 물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3. 민법 개정안 제98조의2에 대한 검토

(1) 동물에 대한 정의 개념 부재에 따른 혼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일정 수준의 공감대가 있는 주된 대상은 “반려동물”이다. 그런데 민법 개정안에서의 변화는 “동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민법에는 동물에 대한 정의 조항이 없고, 개정안 역시 동물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개정안의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표현만으로는 동물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이에 대해 “동물이 단순한 유체물이 아닌 생명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선언하였다.”고 하면서, 권리의 주체로서 사람과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의 이분법적 체계를 사람과 동물, 그리고 물건으로 삼분법적 체계로 변경한 것이라 평가⁶⁵⁾하면서, 물건이 아닌 생명체라고 해서 동물이 사람과 같은 권리주체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⁶⁶⁾ 하지만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것에

63) § 90a Tiere Tiere sind keine Sachen. Sie werden durch besondere Gesetze geschützt. Auf sie sind die für Sachen geltenden Vorschriften entsprechend anzuwenden, soweit nicht etwas anderes bestimmt ist.

64) Art. 641a 1 Tiere sind keine Sachen. 2 Soweit für Tiere keine besonderen Regelungen bestehen, gelten für sie die auf Sachen anwendbaren Vorschriften.

65) 윤철홍,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개정시안”, 『재산법연구』제29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회, 2012, 264면. 이러한 평가는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동일한 내용의 조문에 대한 동일한 평가이다.

66) 윤철홍, 위의 논문, 264면.

서 민법상 문리적으로 명확한 것은 동물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⁶⁷⁾이 아니라는 것뿐이다.

이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전적 의미대로 해석하던지, 개별법상 존재하는 동물에 관한 정의 조항을 활용하여 해석해야 한다. 먼저, 동물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을 제외한 길짐승, 날짐승, 물짐승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동물은 약 100만~120만 종이 알려져 있으며 그중 곤충이 약 80%를 차지한다.⁶⁸⁾ 이에 따를 경우, 동물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일관성 있게 규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다양한 동물 관련 법률에서 해당 법률의 입법 목적에 근거하여 동물에 대한 나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이는 동물에 대한 개념 정의가 아니라 해당 법률에서 인정하는 동물의 범위를 정하는 것에 가깝다. 그리고 그 범위는 주로 대상 동물의 사회적 의미⁶⁹⁾를 반영하여 반려동물, 가축, 실험동물 등으로 어느 정도 유형화되어 있지만, 여러 법률이 각 관련 주무부처별로 독립적으로 관리 및 운영되고 있어 대상 법률 간 일관성 유지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체계나 연계에 한계가 있다.⁷⁰⁾ 또한 동물 관련 법제에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이나 이념 그리고 그에 따른 기본 원칙이 명확치 않고,⁷¹⁾ 일관성이나 통일성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개별 법률 중 특정 법률의 정의를 선택하여 활용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⁷²⁾

즉 동물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해석에 맡기게 되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 이에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는 변화가

67)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68) 표준국어대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35e2f232032f48a5b5ab699aafceee72> 방문일: 2022.1.5.

69) 현행 동물관련 법률이 동물을 생물학적 기준이 아닌 사회적 역할을 기준으로 유형화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김관가홍진희, 앞의 논문 6, 338면.

70) 함태성, 앞의 논문 7, 344면 참조.

71) 함태성, 위의 논문, 343면.

72) 예를 들어, 동물보호법과 민법의 입법목적이 다르므로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범위를 민법상 동물 개념에 끌어 쓰는 것은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는 지적으로 송호영, “동물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는가”, 『법학논총』제39집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210면.

“권리의 주체로서 사람과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의 이분법적 체계를 사람과 동물, 그리고 물건으로 삼분법적 체계로 변경한 것”이라는 평가에 동의하기는 어렵다. “삼분법적 체계”의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일정수준의 “체계”가 갖추어야 한다.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정의조차 명확히 하지 못한 상태로,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변화도 없이 단순히 “다름”을 선언한 것만을 두고 체계의 변화라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선해(善解)라 생각한다.

(2)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의 주체인지 여부

민법상 물건은 권리의 객체이며, 특히 물권의 객체에 해당한다.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의 주체에 해당하는가. 물건이 아닌 경우에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경우⁷³⁾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것이 곧 동물이 권리의 주체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견해를 취하는 경우에도, 동물이 소유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을 찾아보기 어렵다.⁷⁴⁾ 이는 동물의 물건성을 부인하고자 하는 인식 변화의 핵심적 대상이라 할 수 있는 반려동물 역시 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다⁷⁵⁾는 점에서 마찬가지이다. 즉 동물이 소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이러한 권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내용이 필요했던 핵심적인 이유 역시 생명 존중, 동물 보호 내지 동물 학대 방지에 있는 것⁷⁶⁾이지 동물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기 위함이 아니다. 따라서 동물이 물건이 아

73) 재산권의 준점유(제210조),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제345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제371조)을 물권의 객체로 인정하고 있다.

74) 독일의 경우,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정하면서도(독일 민법 제90조의a), “동물의 소유자”는 그 권능 행사시 동물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준수해야 함(독일 민법 제903조)을 정하고 있다.

75)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과 관련한 동물판매업이 유효함을 전제로 동물판매업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동물보호법 제32조). 또한 반려동물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애완동물판매업을 추가하였고(개와 고양이로 한정),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반려동물 거래 표준약관 제정을 권고하고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판매업 표준계약서를 마련한 바 있다.

76) 동물보호법과 민법 간의 정합성 측면에서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로는

니라는 선언만으로 동물이 권리의 주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 및 평가할 필요는 없다.⁷⁷⁾

이러한 평가와는 별개로 동물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 동물을 단순히 물건으로 보지 않는 관점을 입법에 우선 반영하고, 장기적으로 동물을 사람과 물건 사이의 제3자로 보아 특정 사안에서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⁷⁸⁾

동물에게 법적 권리를 인정하려면, 그에 따른 권리 행사와 법적 효과의 귀속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동물이 스스로 사람과 동일한 수준의 권리 행사를 할 수는 없다. 물론 대리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⁷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동물의 의사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대리제도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에 해당하는 동물의 의사를 알 수 없다면 동물은 그저 보호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결국 모든 동물을 대상으로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실현할 수 없는 것을 단순히 선언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동물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전제 하더라도 그 권리는 특정 동물에 제한적인 형태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그나마 고민

안소영·이계정, “민사법적 관점에서 본 동물 관련 법제에 관한 고찰”, 『법조』 제70권 제2호, 법조협회, 2021, 14면; 윤익준, “동물의 지위에 대한 법적정책 담론 - 현행법상 동물의 보호와 동물 복지를 중심으로”, 『법과정책연구』 제16집 제1호, 한국법정책학회, 2016, 47면.

77) 동물이 권리의 주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법원은 반려동물 자체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나 그 규정 내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동물에 대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동물 자체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그 동물이 애완견 등 이른바 반려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118594 판결).”

78) 안소영·이계정, 앞의 논문, 11면.

79) 독일의 경우 연방의회의 법률분과위원회에서 독일 민법 제90조의a의 법률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동물보호단체나 기구가 동물의 대리인으로서 법률상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대리권에 관한 내용이 개정 법률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윤철홍, “독일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인권과 정의』 통권 420호, 대한변호사협회, 2011, 12면.

해 볼 수 있는 방법⁸⁰⁾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물 중 특히 지능이 매우 높고 인간과 유전학상 유사성이 높은 대형 유인원 및 돌고래 등 일부 동물에게 우선적으로 제한적인 형태의 법인격 부여가 필요하다는 견해⁸¹⁾가 있다.⁸²⁾ 문제는 이처럼 특정 동물에 한정하여 법적 권리를 인정한다면, 동물의 종류에 따라 또는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따라 법적 권리의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에 따른 동물 간 불평등⁸³⁾은 해소할 수 없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권리에는 그에 상응하는 의무나 책임이 따르지만 현실적으로 동물이 의무나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⁸⁴⁾ 물론 동물이 권리를 갖고 의무나 책임은 소유자 내지 관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는 있겠지만 이에 대한 온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동물에게 법적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고, 이에 대한 정리를 수반하지 않은 상태로 동물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관련 법제 정비 역시 동물보호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평가⁸⁵⁾가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3) 원칙과 예외

민법 개정안 제98조의2 제1항은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지만, 제2항은 “동

80) 동물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한적 권리 부여와 그 의미만을 언급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으로 권용수·이진홍, 앞의 논문 18, 122면.

81) 유선봉, “동물의 법적지위와 법인격 논쟁”, 『법학논총』제19집 제2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347면.

82) 보호 대상 동물을 정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능력의 차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쾌고감수능력(고통이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고등동물(오랑우탄, 침팬지, 고릴라 등 대형 유인원)은 기본적으로 보호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입법시 쾌고감수능력에 따라 차등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한다; 윤철홍, 앞의 논문 60, 85면.

83) 권용수·이진홍, 앞의 논문 18, 118~119면.

84) 동물은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소개로는 Thomas Kelch, *The Role of the Rational and the Emotive in a Theory of Animal Rights*, 27 B.C. E nvtl. Aff.L. Rev. 1999, p.8.

85) 안소영이계정, 앞의 논문 76, 14면.

물에 관하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이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물건으로 취급한다”와 다를 바 없다.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전제한 “동물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니지만, 물건으로 취급한다.”에 가까운 수준이다. 물론 “변화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⁸⁶⁾ 이 같은 입법형태는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이라는 허울 좋은 소리만 남긴 채 현실은 개선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⁸⁷⁾될 가능성이 더 높다.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모든 동물을 계속해서 물건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동물을 물건이 아닌 것으로 취급할 수도 없다. 이에 사법상 동물에 관한 법적 문제는 순수한 물건으로서의 동물과 물건으로 취급할 수 없거나, 물건으로 취급하고 싶지 않은 동물로 나누어서 접근해야 한다⁸⁸⁾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원칙과 예외의 관점에서 보면, 민법 개정안은 동물은 물건이 아닌 것을 원칙으로, 다만 다른 규정이 없을 경우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을 예외로 정하고 있다. 이는 현실과 정반대이다.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미래에도 대다수의 동물이 대부분의 상황에서 물건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동물이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점에서 존중과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가 있지만, 그 대상이나 조치 역시 제한적이다. 즉 동물은 생명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물건과 달리 평가할 여지가 있지만, 민사법적 관점에서는 동물은 원칙적으로 물건으로 보는 것⁸⁹⁾이 합리적이다. 따

86) 이러한 변화로 이윤극대화를 위해 동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된 것이라 평가하면서 법관으로 하여금 경제성과 동물보호라는 가치가 대립할 경우 후자를 더 중시할 수 있는 것이 정당화되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이유로, 민법 개정안의 변화가 단순한 선언적 의미 이상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견해로는 최준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민법 개정안의 의의와 민사법의 향후 과제, 그리고 민사법의 한계”, 환경법과 정책 제28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2, 6면.

87) 한민지, “스위스법에 따른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동향”, 『서울법학』제28권 제4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355면.

88) 윤철홍, 앞의 논문 60, 91면.

라서 현실에 부합하는 형태로 법률상 원칙과 예외를 정해야 한다면,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원칙으로 할 것이 아니라 현행 민법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사회적 인식 변화로 물건과 달리 취급해야 할 필요가 인정되는 일부 동물에 대한 취급의 변화는 동물보호법이나 해당 동물 관련 법규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V. 결어

민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개정 근거로 제시한 내용 중 반려인구의 증가는 수치상 확인할 수 있고, 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역시 일부 그 변화를 인정할 수 있으며, 동물 보호는 생명 존중과 안전 보장이라는 취지에서 충분히 공감할 여지가 있다. 또한 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달리 취급하려는 이유 역시 동물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동물의 보호 내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함⁹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취지 역시 타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민법상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이 사회적 인식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즉 동물 보호나 동물 복지 차원에서 법을 개정하는 것은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하더라도,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여 물건에 대한 기존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로 인식이 바뀐 상황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⁹¹⁾ 여전히 여러 법률에서 동물을 물건으로 전제한 상태이고, 현 시점에서 해당 법률에서 전제한 상황에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현실에서도 이를 변경할 만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나 공감대가 충분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⁹²⁾ 물론 법에 일부 계몽적 요소를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는 법

89) 김종기, 『주석 민법(민법총칙)』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2019), 262면.

90) 권용수·이진홍, 앞의 논문 18, 118면.

91) 윤철홍, 앞의 논문 60, 66~67면 참조.

92) 동물권을 인정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미국의 논의에서조차 철학적,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물에 대한 인식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윤철홍, 위의 논문, 66면.

에 현실과 지나친 괴리를 발생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민법은 동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여전히 상당수의 경우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민법상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이 사회적 인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는 명백한 이유이다.

하지만 이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민법 개정안은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원칙적인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동물에 관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대다수의 동물 관련 법률이 동물이 물건임을 전제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동물은 원칙적으로 물건이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물건으로 취급한다.”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동물은 생명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물건과 달리 평가할 여지가 있지만, 민사법적 관점에서 동물은 원칙적으로 물건으로 보는 것⁹³⁾이 현실에 부합한다. 따라서 현행 민법을 유지하여 동물은 원칙적으로 물건임을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 한 해 다른 취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예외에 관해서는 동물 보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개별법을 보완하거나 관련 일반법⁹⁴⁾을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이라 생각한다. 동물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물의 지위를 생명이 없는 물건과 구별하는 것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⁹⁵⁾는 지적이 이상적으로 나름의 설득력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산법의 기본법인 민법에 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다방면에서 혼란의 단초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적절한 대응책이 아니다. 즉 현 시점에서 동물 보호는 사법이 아닌 공법의 영역에서 대상과 내용을 제한하여 특별법으로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93) 김종기, 앞의 책, 262면.

94) 동물의 보호, 이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상위법으로 동물기본법이나 동물정책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로는 함태성, 앞의 논문 7, 344면.

95) 동물이 소유자를 비롯한 사람으로부터 인위적 간섭과 괴롭힘, 학대 그리고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근본적인 해답은 동물의 지위를 생명이 없는 물건과 구별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견해로는 윤익준, 앞의 논문 76, 48면.

이후로도 동물의 법적 지위를 논의함에 있어 사회적 인식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나, 그에 따른 과제와 편익에 대한 검토⁹⁶⁾ 역시 철저히 진행되어야 한다.⁹⁷⁾ 여러 가지 법적, 경제적 문제가 뒤얽힌 상황에서 선불리 동물에 대한 법적 지위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⁹⁸⁾는 점에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논문투고일: 2022. 08. 05. 논문심사일: 2022. 09. 06. 게재확정일: 2022. 09. 22.

96) 현재 동물의 비물건화에 관한 충분한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민법상 동물의 비물건화는 그 파급효과가 크므로, 민사법 분야 뿐 아니라, 헌법, 형법 등 법학계 전반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로는 김판기·홍진희, 앞의 논문 6, 333면.

97) 권용수·이진홍, 앞의 논문 18, 116면.

98) 위의 논문, 116면.

■ 참고문헌

- 김동훈, 『동물법 이야기』, PetLove, 2013.
- 김종기, 『주식 민법(민법총칙)』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 권용수 · 이진홍,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관한 기본적 고찰”, 『조세와 법』제13권 제1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 _____, “민법상 동물의 지위에 관한 예비적 고찰”, 『법조』제70권 제2호, 법조협회, 2021.
- 김판기 · 홍진희,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과정책연구』제21집 제3호, 한국법정책학회, 2021.
- _____, “반려동물의 매매계약 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법과정책연구』제20집 제1호 한국법정책학회, 2020.
- 박정기,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51권 제3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송호영, “동물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는가”, 『법학논총』제39집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 안소영 · 이계정, “민사법적 관점에서 본 동물 관련 법제에 관한 고찰”, 『법조』제70권 제2호, 법조협회, 2021.
- 유선봉, “동물의 법적지위와 법인격 논쟁”, 『법학논총』 제19집 제2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 윤익준, “동물의 지위에 대한 법정책적 담론 - 현행법상 동물의 보호와 동물복지를 중심으로”, 『법과정책연구』 제16집 제1호, 한국법정책학회, 2016.
- 윤철홍, “독일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인권과 정의』통권 420호, 대한변호사협회, 2011.
- _____,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민사법학』제56호, 한국민사법학회, 2011.
- _____,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개정시안”, 『재산법연구』제29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회, 2012.
- _____, “민사법 체계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법무부 연구 용역 보고서』, 법무부, 2018.
- 이용숙, “가족으로서의 반려동물의 의미와 반려동물로 인한 구별 짓기”, 『한국문화인류학』 5

- 0권 2호, 한국문화인류학회, 2017.
- 이재문·임승재, “사행성 스포츠산업 활성화 전략: 경마”, 『한국스포츠학회지』제19권 3호, 한국스포츠학회, 2021.
- 최준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민법 개정안의 의의와 민사법의 향후 과제, 그리고 민사법의 한계”, 『환경법과 정책』제28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2.
- 한민지, “스위스법에 따른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동향”, 『서울법학』제28권 제4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 함태성, “제19대 대통령선거 동물복지 공약에 대한 동물법적 평가와 향후 입법적 과제”, 『경희법학』제52권 제2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 _____, “우리나라 동물법의 현황 및 진단, 그리고 향후 과제”, 『법과사회』60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19.
- _____, “동물보호법의 입법적 평가와 향후 과제”, 『공법학연구』제21권 제4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20.
- 김종란·임경민, “동물대체시험법”,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8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0.
- 진선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2021.
- 황경원·손광표,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 - 반려가구 현황과 노령견 양육실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1.
- 『2019 사행산업 백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20.
- 『2020 사행산업 관련 통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21.
- Thomas Kelch, The Role of the Rational and the Emotive in a Theory of Animal Rights, 27 B.C. Envtl. Aff. L. Rev. 1999.

■ Abstract

A few thoughts on the legal status of animals in the civil law

KIM, DO HOON*

The growth of the companion animal related industry, an increase in related problems, and a change in the perception of companion animals are leading to interest in the legal status of animals. According to the current civil law, animals are thing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foreign countries, there are legislative cases that include a declaration that animals are not things in the civil law. Recently, the ministry of justice submitted an amendment to the civil law to the national assembly declaring that animals are not things. In order to decide whether or not to change the legal status of animals under civil law, a careful review of several matters is required. First,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a change in the current perception of animals meets the need for a change in the legal status of animals as a whole. Second,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perception of animals premised on the animal-related laws. Third, it is necessary to review what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in relation to change.

This paper reviewed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civil law on the change of the legal status of animals, focusing on the reasons and main contents. The increase in the companion population, the spread of social awareness for animal protection, and the need for animal protection, suggested as the basis for the amendment, can be acknowledged. However, it is difficult to agree with the argument that the legal status of animals in the civil law does not correspond to changes in social perception. This is because many laws still presuppose animals as things, and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re is a change in the situation premised by the relevant laws at this time, and it is difficult to judge that there is sufficient social awareness or consensus to change this in reality. In spite of this reality, the amendment made it in principle that animals are not things. In addition, except for cases where there are special provisions in the law regarding animals, the regulations on things are to be applied. Animals are living beings, so they can be treated differently from things. However, in principle, it is in accordance with reality to view animals as things in

* Duksung Women's University, Professor

the civil law. Therefore, by maintaining the current civil law, animals must be recognized as things in principle, and can be treated differently only in exceptionally stipulated cases. For exceptions, it is a reasonable approach to supplement the relevant individual laws or to enact the relevant general laws so that animal protection can be systematically implemented.

